

주민관치에서 주민자치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함께하는,
주민자치 공약분석을 위한 정책질의 답변자료

2020. 3. 23(월) 이후 예정

2합경우

1

Q. 후보자 소개 <지역구/ 정당명/ 후보자명 순>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고양시(을),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함경우 (*2020.02.27 공천 확정)

2

Q. 주민자치에 대한 기초 질문

☒ 질문 사항

- ①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주민자치의 필요성/중요성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 ②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주민자치의 실질화/현실화 방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다음 페이지에 답변 이어집니다.)

A. 후보님 답변 >

2-1

◆ **(주민자치의 필요성/중요성)** 핵심은, 내 삶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주민여러분들께서 ‘이것이 내 것이다!’, ‘내 권리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주민자치는 활짝 열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위 ‘민주주의 위기’를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상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헌법 제1조입니다.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듯 헌법에서 ‘민주’라는 말과 별도로 ‘공화’라는 말을 넣은 이유를 되짚어본다면, 이 둘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정치체제 뿌리를 둔 것으로 그리스어 ‘democratia’이고, 대중과 지배, 두 단어가 합쳐진 국민의 지배를 뜻합니다. 한편 공화주의나 공화국은 로마의 정치체제에 뿌리를 둔 라틴어 ‘res publica’입니다. 다시 말해 **‘공화(共和), 여럿이 화합한다’는 의미로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분명 공화주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의미를 적절하게 찾는다면, 바로 ‘공동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일정한 의무를 지고 연대를 해야 하는데, 함께 잘 사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도 공동체나 구성원(시민, 더 좁혀 들어가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모두가 노력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 마을의 운명을 가장 먼저 걱정하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지켜내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체의 지나친 권력 남용 등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

◆ 실효적인 현실화 방안은 옹당 ‘법적인 부분’에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2019.03.29)했고,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3법 제·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조례발안제를 가리켜 ‘주민참여 3법’이라 부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조례를 만들고(주민조례발안제), 투표에 부치고(주민투표), 일 못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소환(주민소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이 법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 우선으로 중요하고, 통과된 이후에는 제대로 정착해야 하는 부분이 또 남아있습니다. **(※ 5번 질의응답에서와 같이 법안의 맹점, 한계점 지적도 반드시 필요)**

아울러, 논의 중인 同 법안이 조금 더 보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안) 외에도, 현재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5-2질문과도 연결](#))에 대해 저 함경우와 저희 당이 함께 중지를 모으고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힘을 적극 실어드리겠습니다.

3

Q. 주민자치회에 관한 질문

☒ 질문 사항

- ①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②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회칙으로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대표와 임원을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회원들이 선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인사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회비, 기부금, 수익 등)조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재정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⑥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공공을 실현하는 지역조직으로, 주민의 공공을 실현하는 주민조직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표성을 가져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⑦ 주민자치회를 읍면동 구역에 설치하였을 경우에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자치회 대표/임원이 읍면동 구역에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가를 포함하여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규모와 면적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에 답변 이어집니다.)

A 후보님 답변 >

3-1

- ◆ **(주민자치회와 주민)** 정부와 주민 사이에 놓인 이중적인 관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주민으로부터 자치회가 갖는 **주민 대표성의 의미와 권한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민자치가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들의 위상, 지식역량, 실천역량 강화에 매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게 되다보면 자치회와 주민 간의 단단한 신뢰는 물론 대표성도 한 층 배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 ↳ ****3-6, 3-7 질문과 연결 >>**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민들의 조직, 대표성을 가지려면 분권에 대한 법적 권한을 사실상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수백 년 전 미국의 Town식 자치법령 등을 보면 오늘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마을의 가치관, 풍습, 관습 등은 존중되면서 그 안에서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새로운 주민자치가 굉장히 민주주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바로 주민들의 참여의식과 공화주의 정신에 기반한 주민들, 시민들의 덕성입니다.

자치회의 대표성을 위한 법적 뒷받침은, 관련 법안들이 제정되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로 다시 귀결되므로 이 부분은 저, 함경우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고충, 뜻을 살피겠습니다.

한편, 주민들로부터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 자치회의 지금과 같은 끊임없는 노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인구통계적 대표성을 띠어야 하는데, 어떤 결정 사안이든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근거로 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 또한 지역 주민들 간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로부터 단순 명예직으로서 운영되기 보다는, 일정 부분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살피겠습니다. 자치회의 무궁한 발전에 힘껏 응원 드립니다.

3-2

- ◆ **(주민자치회와 정부)** 3-1과 같은 맥락으로 정부와 주민 사이에 놓인 이중적인 관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정부로부터 자치회가 갖는 주민 대표성의 의미와 권한 정도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곧 자치회가 획득하고자 하는 입법권, 인사권 등의 문제와도 결부되겠으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로 독립 가능한가의 문제, 또한 어느 정도로 이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자율성)입니다. 요컨대 정부와 주민, 양쪽으로부터 자치회가 정립해야 하는 관계는 향후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입법부를 통해,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 다방면(개정안 통과 등)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안들은 주민여러분들과 자치회의 입장을 각각 충분히 잘 살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3 및 3-4, 3-5

- ◆ **(주민자치회의 입법권과 인사권, 재정권)** 同 자치회의 3권은 주민으로부터 자치회가 갖는 대표성 3-1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뒷받침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이것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주민간의 의견이 서로 간에 다를 수 있고,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 또한, 우리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숙의와 설득을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회칙을 개정하거나 권한을 위임받도록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면 자치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회의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겠고요. 향후 자치회의 활약에 저, 함경우도 든든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4

Q.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 질문 사항

- ① 모법인 '자치분권법'에서 정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인데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만든 표준 조례에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을 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세요.
- ② 행안부가 권유하고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A 후보님 답변 >

4-1

- ◆ (모법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관련) 해당 부분이 빠지게 됨으로써 정부는 자치회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상황에 따라, 침해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주민이 아닌 타자에 의한 관리 감독이라든지, 의사결정 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주민자치'가 갖는 의미가 자칫 퇴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공분을 살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추후, 개정 논의 차원에서 구체화시키거나 지구 수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유심히 살펴보고겠습니다.

4-2

- ◆ (주민자치회와 정부) 4-1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정착화되는 단계까지는 일정 부분 동자치지원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원관을 파견형식으로 받거나, 파견이라 하더라도 기간에 제한을 두거나 혹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는 통로이자 소통창구 역할 이외에, 다른 여타 자치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제한을 명시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자치지원관이 제도적 뒷받침이라고는 하나, 자칫 자치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치회 본연의 운영 목적과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하겠습니다.

5

Q. 주민자치회 법안 관련 질문

☑ 질문 사항

- ①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관련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중 제25조(주민자치회)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②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을 제정하여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A 후보님 답변 >

5-1

- ◆ (제25조 관련) 해당 개정 지방자치법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한다는 점입니다. 1조 목적에 '지방자치행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며'로 시작하여 주민의 참여권을 명시하였으며, 25조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활동에 대해 주민에게 적극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하여, 현재와 같이 전국이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양립형 구성이 아닌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개정안에는 여전히 한계가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가 법의 국회통과를 또한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5-2

- ◆ 同 법안은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되면서 새로운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발의에 참여하고 함께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며, 그야말로 주민자치에 여야가 없음을 확인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앞서 41에서 질문 주셨던 사안만 보더라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주민자치가 무력화될 수 있는 맹점도 있었는데, 앞으로 새롭게 발의된 同 법안을 통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와 그에 따른 지방의 균형발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게 되길 저 함경우도, 간절히 희망합니다.

6

Q. 주민자치회/위원들에게 한 말씀

A 후보님 답변 >

6

- ◆ (저, 함경우도 감사드립니다.) 지방분권은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며, 창조적 파괴를 통한 가치창출로 이제는 지방분권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구 100만 수도권 도시답게 대도시 정책지향점으로서의 차등분권, 자율성과 다양성, 도시수요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 우리 지역의 문제,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주민, 내가 주인인 자치회가 더욱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지역 문제, 마을에서 부족했던 것들, 지역 주민의 갈등 등 우리 동네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주민자치는 오랜 세월에도 아직 정착되지 못한 부분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잘 사는 세상, 주민이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고, 그것이 나의 권리인 사회를 만들며 알리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저도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함께 뜻을 모으겠다고 다짐합니다. 발의된 국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 함경우에게 그 어려움을 나누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겠습니다. 달라지는 우리지역의 삶! 새로운 고양시대! 2번에는 경우가 다릅니다! 다시 한 번 자치회와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